

## 위원회 활동 1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체결

(勞) 집회 자제와 임·단협 시기 조정  
(使) 격리자 휴식 보장과 고용유지 위한 노력 등 담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6일(금) 10: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의 확대·지속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및 노동시장 침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노사정은 이에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공감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실천사항을 담기 위해 논의하였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노사정 간 확대의제개발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노사정이 잠정 합의(3.4.)하였고, 본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동의(3.5.)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코로나19’ 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와 관련해서, 노·사는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사측은 자가격리

| 위원회 활동 1 | 01-0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체결

| 위원회 활동 2 | 04-07

해운산업위, 선원일자리 창출 방안 합의

| 위원회 활동 3 | 07-08

금융산업위원회 논의 종료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부여 및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노측은 당분간 대규모 집회 등을 자제하고 임금 및 단체 교섭 시기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하청·파견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예방대책이 차별 없이 적용 되도록 노력하고, 확진자·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로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근무 지원’과 관련해서, 노사는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고, 가족·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가족돌봄 비용 적기 지원으로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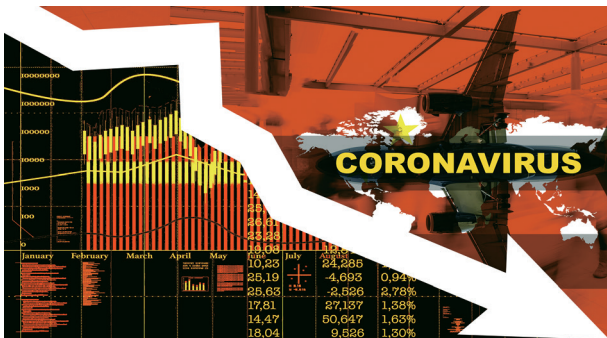
셋째,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노사는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 용자·체당금 지원 확대 또는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노사정은 지역화폐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모두는 국회 등에서도 합의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인사말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고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정책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오늘 선언의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

노사정 대표를 포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모두는 ‘코로나19’가 확산·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및 노동시장 침체라는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당면한 경제 및 노동시장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노사정이 각각 실천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1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강화

가. 노사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건당국의 조치 사항을 적극 준수한다.

나. 사측은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장소를 폐쇄하는 한편,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 다. 노측은 당분간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임금 및 단체교섭의 시기와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 라. 노사는 사업장의 예방대책을 직접 고용된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하청·파견 등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노사정은 확진자, 자가격리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마.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로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2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근무 지원**

- 가. 노사는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차출근, 원격·재택근무, 선택근무 등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나. 노사는 가족·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 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시차 출근, 원격·재택근무, 선택근무의 조속한 시행 지원과 함께, 가족돌봄 비용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노사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한다.

**3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 가.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협조한다.
- 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이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 및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의 용자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 라. 정부는 체당금 지원을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4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위기 극복**

- 가. 노사정은 지역 화폐·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 나. 정부는 영세사업자 등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완화와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시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모두는 ‘코로나19’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위 합의문에서 약속한 사항과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조기에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 등에서도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 노사정은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한국노총도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기업들이 초기에는 감염정보 공개 요구가 많았지만, 이후에는 자금압박에 대한 해소 대책 건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고용안 전망을 되돌아보고 경사노위에서 합의 했던 ‘사회부조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도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각이 24시간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며, “사태 개선을 위해 추진한 추경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역의 중요성과 취약계층 등에 재난 기본 소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김 실장은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며,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 기본소득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해서 뜻을 모아준 노사정에 감사하다”면서, “오늘 노사합의 선언의 정신이 개별 기업, 지역, 산업 차원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행을 위한 점검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sc](#)



## 위원회 활동 2

# 업종별위원회 첫 합의 해운산업위, 선원일자리 창출 방안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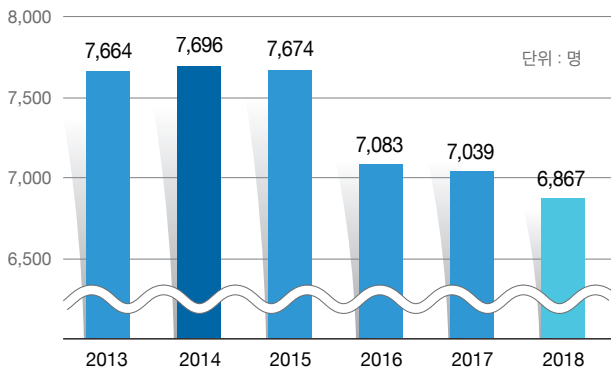
- 노사 공동 자원 마련, 해기사 일자리 만든다
- 산업정책에 일자리 연계 모델, 업종차원의 확산 기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위원장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이하 위원회)는 2월 20일(목) 15: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한진해운 파산 등 어려워진 해운산업의 재건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족했다.(2018.11.23.) 위원회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일부 의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여 지난 13개월 동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핵심 정책에 선원 고용을 연계하



<한국 외항선사의 해기사 고용 사례 현황>



는 방안과 선원일자리 노·사·정 공동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합의의 주요 영역은 △선원일자리사업 시행, △화물 확대와 고용 연계 방안, △신규 선박건조와 고용 연계방안이다.

먼저, 선원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노·사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각 5억 원씩 재원을 출연하여 한국 상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해기사의 일자리 창출 사업 전개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도 노·사의 노력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그리고, 화물확대와 고용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가스, 원유 등 해외 전략 물자 구매 시 계약 평가에 고용창출 효과를 지표에 포함하는 등 운송 화물 확대와 국내 고용창출이 가능한 방식의 평가로 전환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규선박건조와 고용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신규선박건조 투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심사 시 평가지표에 한국선원 승선율을 중요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이 일자리 확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출범이후 이뤄낸 첫 업종별위원회 합의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노·사·정이 합심하여 정규직 선원일자리 확대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노사가 우선 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마중물을 만들고, 정부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업종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일자리 사업 모델로 다른 산업에도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둘째, 산업(재건)정책에 일자리 창출 방안 연계한 모델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과 한국선원 고용 증대를 구체적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연계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해운재건 5개년 계획 : 해운 재도약을 넘어 수출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성장전략(2018.4.5.)

셋째,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출범이후 첫 번째 업종별위원회 합의로서 중범위 수준으로서 업종(산업)별 사회적 대화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산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파트너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수용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딛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정책의 내용을 신설·조정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산업정책 거버넌스 운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마련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 선언식」에 참석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의 정태길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왔던 해운업 지원 정책이 선사와 선주에게 집중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선원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고용의 질을 높여서 노·사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합의문은 우리 선원 노동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운업계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

##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균형 있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양질의 선원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해운산업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 1 선원일자리사업 시행

- 1-1. 노·사·정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려워진 해운산업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선원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유지 사업 등을 진행한다.
- 1-2. 정규직 일자리 창출사업은 한국 상선대에 한국인 해기사를 우선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1-3. 동 사업에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 정신을 살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에서 매년 각각 5억 원을 출연한다. 정부는 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 1-4. 동 사업은 2020년부터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노·사·정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 2 화물 확대와 고용 연계 방안

- 2-1. 가스, 원유 등 전략물자 도입 시 FOB\* 인도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해운산업발전 및 국적선원 고용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 \*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계약
  - 전략물자 관련 공기업의 계약 평가지표에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등의 외 부효과를 평가하는 '부대 효과'를 감안한다.
- 2-2. 국적선원에 의한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체계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안정 운송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노·사·정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 3 신규선박건조와 고용 연계 방안

- 3-1. 신규선박 건조 투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사 시 평가지표\* 중 '정책 부합성' 지표 내에 보유선박(필수, 지정선박 제외) '국적선원 승선율'을 우선 순위 세부 평가항목으로 신설하고 총배점 100점 중 10점 이상으로 반영한다.
  - \* 평가지표 : 기업 신용도(배점 25), 담보력(30), 사업성(25), 정책 부합성(20), 지원 형평성 등(가감점, +10/-10)
- 3-2. 금융지원상품 이용대가 산정 시 보증료 할인·할증 기준 14개 항목 중 '해운산업관련 동반성장 효과' 내에 '국적선원 승선율'을 추가한다.
  - 신조금융을 지원받는 선사의 기존선대 국적선원 승선정도에 따라 기본 요율의 최대 4%까지 할인을 추진한다.
- 3-3. 투자 수익률 할인기준에 '국적선원 승선율'을 포함한다.

2020. 2. 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선주협회 정태순 회장은 “해운은 우리나라 산업에 동맥과도 같고, 선원들이 제4군의 역할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선원들이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세계 최고의 선원들로 다시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경사노위의 합의를 계기로 우리 선원들의 고용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해운재건을 단단히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고 우리나라 해운의 미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업종별 대화의 첫 성과물이란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에 이어 다른 업종에서도 대화가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도 “산업정책 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사회적 합의는 한국 사회적 대화의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을 의



미한다”며, “노사의 결실을 정부가 합당하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진했다.

끝으로 해운산업위원회 한종길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줄어들던 한국인선원 정규직 고용이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 재건이 노·사정의 참여와 노력으로 더욱 힘차게 추진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특히, 청년 해기사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slc**

### 위원회 활동 3

## 금융산업위원회 논의 종료

-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 공감대
- 노동계 반대로 ‘임금 결정제도’ 쟁점 최종 조율에 어려움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하 금융산업위)’는 2월 17일(월) 제2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금융산업위는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노사가 제안한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금융산업 공동 실태조사’(19.10.22 발표)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여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해왔다.

\*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성과문화 개선 (경영계) 임금체계 개편과 산별 교섭 효율화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



##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 주요 내용

1. (노동시간 단축) 기관 특성을 반영한 표준 출퇴근시간 도입, 고용유지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 마련,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 도입방안 마련,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취지를 살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정착을 위한 노사 협력 등
2. (성과문화 개선) 2018.12월 합의한 '과당경쟁 방지 금융노사 TF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 촉구, 과도한 단기성 과주의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기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변화 등
3. (임금결정방식 개선)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임금결정방식의 개선 : 임금인상은 하후상박, 점진적 연공성 완화 및 직무기반 임금비중 확대 방향
4. (산별교섭 효율화) 의제선정위원회 활성화, 산별교섭의 효율성 및 체제 강화를 위한 합리적 교섭방안 마련, 이종교섭과 쟁의 등에 관한 세부 방안 마련 등
5. (교육·훈련 강화) 금융 산업 내 근로자의 고용안정, 생산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마련
6. (노사정 협의채널 운영) '노사정 협의채널'을 운영을 통해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협의 체제 강화



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을 비롯해 위원회 내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지만, 노동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전국 금융산업노조는 직무기반 임금 비중의 확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공익위원 권고문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1.28.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

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김유선 위원장은 “대표적 좋은 일자리로서 금융 산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의견 조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금융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유지·창출’ 과제 중 임금결정방식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낸 것만으로도 그의 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sic**

